

독자가 만드는 朝鮮日報

朝鮮日報를 읽고

정신대-위안부 구별해야

여자정신대 문제와 중군위안부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하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언론과 사회분위기는 여자정신대가 곧 중군위안부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자정신대의 일부가 중군위안부였다든가, 중군위안부를 여자정신대라는 미명(?)하에 감도했다든가 하는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중군위안부 아닌 (일반)여자정신대가 존재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모르는 오늘의 젊은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여자정신대, 즉 중군위안부라는 인식은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위안부생활과는 전연 무연한(일반)여자정신대원까지도 모두 중군위안부 출신이라고 오인케하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은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1월15일자 23면의 「日, 국교생도 정신대 징발」의 제목은 정신대, 즉 위안부라는 등식에 의하면 국교생을 중군위안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14일 TV에서도 이런 누앙스로 보도되었다),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 富山市 不二越(공장)정신대로 출발…」 「군수공장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는…」라는 내용이 있다.

도야마(富山)시는 당시 中小규모의 제약회사가 많았던 도시였으므로 이 不二越 공장은 소녀종업원이 많이 필요했던 제약 공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해서 이 기사내용으로 정신대로 동원된 소녀속에 중군위안부가 된 우리의 소녀가 전연 없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이 기사 말미에도 「당시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정신대로 끌려갔으나 나중에는 위안부생활을 해야 하는 「중군위안정신대」로 또 차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적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중인 日本史 교과서에도 「1943년에는 대학-고등-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징병적령의 학도를 군에 소집 (학도출진)하는 한편,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생도를 근로에 동원하고, 미혼의 여성을 여자정신대로 편성하여 군수공장 등에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현재의 60대 후반의 연령층이면 당시에 여자정신대의 노래가 여학교등에서 불려졌다는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있을 것이다. 즉 여자정신대=중군위안부는 아닌 것이다.

남을 매도하기는 쉽다. 그러나 남에게 사과를 담연히 얻어내고 응분의 보상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이 빠져나갈수 없는 진실되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중군위안부 문제와 여자정신대 문제는 구분하여, 전자는 파렴치한 성적희롱의 인권문제로, 후자는 강제징집과 동일한 범주에서 따지는 편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당시의 담임교사 이케다여사(68세)에 의한 구 학적부의 발견이 왜 피해자인 우리 손으로 사회에 조명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동포로

현이고, 따라서 현재 언론이 쓰고 있는 「보상」이라는 표현은 「배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대책위에서 처음부터 잘못 사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신대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좀더 침착하게 그 책임을 명백히 가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용어사용에 엄밀성을 가졌으면 한다.

<천정렬·서울대 법대 대학원>

제주지역 동시발행 환영

조선일보가 15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동시발행을 개시했다니 在京濟州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서울시내관의 마감뉴스를 팩시밀리를 이용, 제주도내 조간신문인 제주신문사에 보내 동시 인쇄한다니 획기적인 일이다.

조간신문의 경주김포공항에서 아침항공편으로 제주에 탁송되어 제주시내에는 일찍 배달되지만 그 이외지역에는 정오까지 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 전날 저녁 7시쯤 인쇄되는신문을 지방에 보급하고 있어 서울관에 비해 뉴스전달이 크게 늦어져 왔다.

조선일보가 이제 제주신문과의 계약으로 조간신문의 최종 마감관인 서울시내관 기사를 제주현지에서 동시에 발행하게된 것은 제주도종합개발의 추진과 관광제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기회에 제주인으로서, 애독자로서 바라고 싶은것은 53만 제주도민은 특별조치법, 1차산업, 관광, 그리고 환경보존등의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세계 10대 관광지지의 하나인 제주도가 균형개발과 환경보존이란 양쪽 측면이 조화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조선일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달있기를 바란다.

<허영준·서울교육청 공보관>

보사부 보복감사 한심

1월15일자 기자수첩「화풀이감사」를 읽고 직접 수혜자인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보사부의 구태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사연의 지역의료보험 실태조사연구에서 보험료부과, 급여등 전반적 모순이 드러났고, 또 그것이 기사화 되었다해서 보복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보사당국의 복지사회정책 추무부서로서 일대 인식변화를 요구케 한다.

과연 신임보사장관의 말대로 그 연구조사가 연구비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꼭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에 이득이 되고, 선거에 이득이 되는 허위과장, 홍보성 연구통계만 작성해야하는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보사부에 강력건의컨대 차제에 보사연에서 연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임을 명심하고 즉각 정책에 반영하길 바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지금 안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바란다. 명실상부한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발전시킬 때 6공화국사회분야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는 이제 도가 비로소 명실상부하리라 생각된다.

<조경만·경기 동두천시 광암동>